

# 제조업 겨울잠 깨나... 조선·車·철강·기계 등 전망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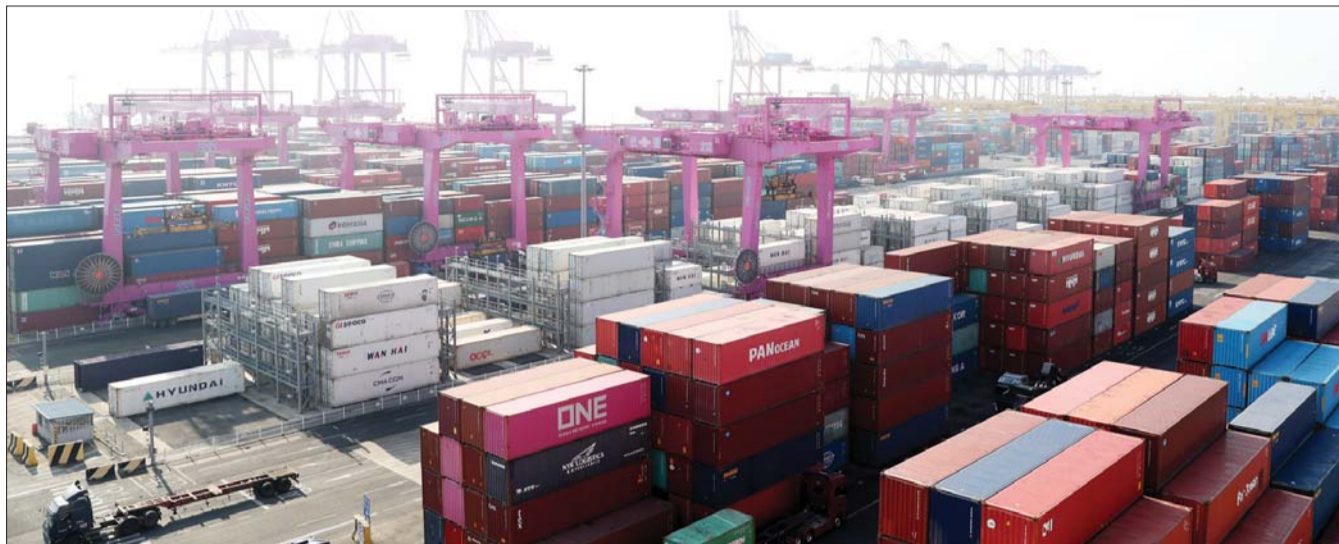
**전문가 2월 제조업황 전망**  
PSI 지수 77→90으로 올라  
부정적 전망 대한 우려감 약화  
내수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디스플레이·화학 등은 하락

다음달 국내 제조업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제조업이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할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선·자동차·철강·휴대폰·기계 업황 개선이 주목된다.

2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2월 제조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가 전월(77)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90을 기록했다.

PSI지수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0~200의 범위로 나타나는데,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2월 업황 전망 PSI가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한 90을 기록하면서 부정적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내수(87)는 5개월 만에 상승하고, 수출(91)은 2개월 연속 상승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뉴스시스

하면서 생산(96) 역시 추가 상승하고, 투자(84)도 4개월 만에 상승했다. 국내 제조업의 1월 업황 현황 PSI는 8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기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다. 내수(79)가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83)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생산(93) 역시 4개월 만에 상승했다. 재고(120)는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 투자(77)가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한 가운데 채산성(88)은 2개월 연속 올랐다. 기준점인 100에 미치지 못했지만, 한 달 사이 업황 전망이 크게 올라 회복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더 침체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

은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산업경기 전문가들은 특히 내달 조선·자동차·철강·휴대폰·기계 분야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월 세부 업종별 제조업황 PSI를 보면, 조선(110), 자동차(107), 철강(108), 휴대폰(104), 기계(104) PSI가 기준점(100)을 넘어 업황 개선 기대감을 시사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섬유와 화학, 바이오·헬스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 등 기계부와 휴대폰 등 ICT부문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상승했다. 업종별 전달(1월) 업황 현황 PSI는 철강과 바이오·헬스에서 100을 상회한

반면, ICT부문의 전 업종과 소재 일부 업종에서 100을 상당폭 하회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바이오·헬스와 철강, 조선, 휴대폰, 반도체 등의 업종에서 두 자릿수 상승하고, 가전과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디스플레이, 화학, 섬유 등의 업종은 하락했다. 조선의 경우 생산(145)과 수출(135)이 기준점을 훌쩍 넘어 개선 가능성이 컸고, 투자액(115)과 채산성(115)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금리로 선박 금융 비용이 상승해 선박 발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반면, 건조량과 수주량

회복이 예상되며 높은 선거로 수주한 일부 선박들의 건조 착수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연초 계획된 해운사와 에너지사의 투자 실현 예상 등 긍정 평가가 많다.

철강은 내수(90)와 수출(90)이 기준점 이하로 전망되나, 생산(142), 투자액(117)에서 개선 의견이 많았고, 자동차는 생산(120), 수출(107)이 개선되는 반면 투자액(93), 채산성(8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 제한정책 완화 이후 철강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또 중국 경기 부양과 빅테크 규제 완화 등 공동 부유 정책 기조 완화 등으로 중국 철강 수입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자동차의 경우 고금리와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이 있는 반면, 신차 판매 호조, 1분기 누적된 대기 수요 실현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금리 인하 가능 전망으로 경기 위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긍정 요인으로 본다.

휴대폰의 경우 '소비 회복 지연'과 '경기 둔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출시'와 함께 판매가 증가하고 매출과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제로 코로나' 여파... 경기 침체에 기업 상폐 '우수수'

### 차이나 뉴스&리포트

지난해 상장폐지 기업 46곳  
전년 대비 2배 급증 '최고치'  
경기 침체로 재무상태 악화  
상폐 가속... 투자자 주주의

중국 증시에 퇴출 주의보가 내려졌다. '제로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들의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이보다도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되고 있다. 25일 차이나신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 등에서 퇴출된 기업은 총 46개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대부분 재무상태가 악화돼 상장폐지 이유였다. 올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이나신이 지난 3분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 가운데 최소 80곳이 상장 유지를 위

한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증시에서 상장폐지 요건은 재무성과 외에도 내부통제, 법 위반 등이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0년 말에 증시 선진화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했다. 증시를 어지럽히는 '썩은 사과(bad apple)'와 만년 한계기업 상태인 이른바 '좀비기업' 등을 모두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작년 퇴출된 기업 가운데 39곳이 재무 성과 요건에 걸렸다. 순손실과 함

께 매출이 1억위안 미만이거나 최근 회계연도 말에 순자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가 요건으로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20거래일 연속 주당 1위안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3억위안 미만이면 상장폐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5000개 안팎이며, 시가총액은 약 79조위안에 달한다.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

전히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수단들이 다양하게 악용되고 있다.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아이 테크놀로지는 3년 연속 적자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지난달 주요 주주가 7억위안의 현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퇴출을 피했지만 이달 들어 해당 주주가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자본 납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칭화대 금융연구소 장웨이 부회장은 "상장폐지 규정이 더욱 엄격해지는 가운데 소액주주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들은 중국 증시의 기반이지만 가장 쉽게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경기·물가·금융 3가지 변수, 가중치 판단 잘해야"

>> 1면 '공공요금 치솟는데'서 계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유로지역의 가스·전기요금은 에너지요금 상승률이 40%를 상회한 반면 한국은 13%에 그쳤다"며 "한국의 경우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올해 반영돼 물가상승 둔화속도가 더뎠을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뒤늦게 반영돼 물가가 잡히는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美, 기준금리 0.25%p 인상 가능성 98%  
이처럼 물가자극요소가 더해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 "물가를 생각하면 최종금리 수준은 3.50~3.75% 정도가 될 것"이라며 "한 번 더 올린다면 2월에 빨리 올려놓고 시장상황을 보는 것이 불확실성을 더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이날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시장의 98.1%는 내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금리를 0.25%p 인상할 경우 시장 하락 위험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0.25%p 인상할 경우 한미간 금리차는 1.25%p로 벌여

진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로 한국의 기준금리(3.5%)보다 1%p 높다. 한미간 금리차가 확대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품 환산 가격을 높여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한미간 금리차 확대가 곧바로 자금유출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이자 부담에 소비약화  
업계 안팎에선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년동안 주택가격이 급

등해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경제까지 어려워지면서 추가 대출을 쓰는 서민들이 늘었다"며 "그 여파로 인해 금리를 조금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출이자 부담은 민간소비 약화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 이날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이슈분석'을 통해 올해 국내 소비역력이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가계저축이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으나 이자부담 증가와 실질구매력 저하가 이어지면서 소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크게 올리면 부채 정리(디레버리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한은이)경기·물가·금융 등 3가지 변수의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시스